비교정치론 1조 토론 보고서

인도 국수주의 기원,
대내외적 압력에 대한 위기의식의 산물

부제: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정책주권의 위기

2018079698 김대영

2021093890 김현우

2019020900 박지은

2018060746 서동영

2019000800 최성민

2018020028 홍일주

목차

서론	인도 권위의 위기, 정책 주권의 위기
2. 본론 1	1.1 탈 냉전기 이후 인도의 경제정책
	1.2 세계 벨류 체인에서 중간 공급망 국가의 딜레마 축적
	1.3 대의제의 오작동: 표면적으로는 최대 인구의 민주국가, 후진적인 선거양태
3. 본론 2	2.1 ‘모디노믹스’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2.2 모디의 ‘힌두국가’
4. 결론	해법, 신자유주의 이후 시대 메타 이데올로기 지평 주권, 보호, 통제

서론

20세기 후반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국가 쇠퇴'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국가는 정치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 정치체이다.
국가를 다른 정치 행위자들과 구분하게 하는 핵심 개념은 주권이다. 국가 주권은 국제법상 최고 권력이므로 여타 행위자의 권력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 주권은 가치명제적 성격을 지니며, 가치명제에서 기인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롯이 가치명제의 문제만은 아니다. 주권이 가치 명제이자, 당위적 명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해당 가치를 물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는 경제 기반시설과 공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는 세금을 통해 운용된다. 요컨대 가치명제 근저에는 사실명제가 작동한다.
이스턴(David Easton)의 명제 '정치는 사회적 가치,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에서는 실제 권위를 지탱하는 '자원(사실적 가치) 배분의 적정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국가 공동체 내부에서 부정적 가치의 확산이 이뤄지면, 그것은 권력의 감퇴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위기는 배분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실적 가치의 부정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서구 국가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자원 배분으로 정당화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온 반면, 제3세계 많은 개도국은 동일한 위기에 직면해 정권 차원의 불안전성을 경험했다." 가치의 배분 과정에서 부정적 가치가 커질 때 국가위기의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적 가치의 긍정성과 부정성으로 양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사회현상을 유형별로 개념화해 아래의 표로 정리했다. 양자 간의 관계는 주로 항목별 대립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가치의 성격	긍정성	부정성
정치적	자유, 평등, 정의/공정	속박, 불평등, 불의/불공정
경제적	경제적 안녕, 근대화	경제위기/빈곤, 저발전
사회적	치안, 건강/복지, 교육, 환경, 노동권보장	무질서, 질병, 교육 부족, 환경오염
상징체계	종교, 문화, 전통	종교갈등, 문화충돌 부족갈등
외부요인	동맹,협력	배제, 제재

1. 정치적 가치 토대로서 정의
2.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공정과 분배
3.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는 사회적 합의
4. 구성원을 결속하는 문화 상징적 가치 (종교)
5.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 네트워크

1조는 큰 틀에서 배타적 종교성을 띠는 모디의 힌두국가를 인도의 위기의 중간 단계의 표상이라 분석했다. 즉, 힌두교라는 내집단을 형성하는 이유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권위의 하락의 대안이라 분석했고, 종교갈등이라는 부정적 가치로 정당성을 연명하고 있는 중이다.

권위의 하락의 대표적 요인으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세계 벨류 체인에서 중간 공급망 국가의 딜레마 축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인도는 '민주주의'라는 긍정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의 종교적 특성, 카스트 제도와 같은 토착 문화가 경제적 양극화를 만들어내며 민주주의 더욱 난잡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 또한 함께 확인했다. 결론에서는 경제적 양극화, 즉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론 1.1 탈 냉전기 이후 인도의 경제정책

인도의 경제는 1991년을 신경제정책을 통한 본격적인 개혁을 기점으로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안정했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는 수입/수출의 통제 완화와 경제 자유화를 향해 나아갔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에 경제 개혁에 속도가 붙기 전까지는 수입/수출 통제의 완화/강화와 자유화 조치의 추진과 취소를 반복해 왔는데, 그런 경제적 조치의 번복에는 1956/57년의 외환위기와 1966년 세계은행의 루피 평가절하에 대한 인도 국내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산업 구조의 다변화와 기존의 수입통제의 비효율성을 기업들이 인지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제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와 독립 이후 독점해온 정권이 민간 상공업의 지지를 얻지 못해 교체된 정권이 자유화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며 추진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인도의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빠른 산업 성장의 촉진과 대내외적 차입이 고수준의 공공지출의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총 수요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대규모 차입은 장기적으로는 지속력이 떨어져 위험했고, 1991년 6월에 위기가 촉발되자 7월에 신경제정책으로 불리는 경제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1991년 7월의 경제개혁은 기본적으로 각종 제약을 전제한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제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했던 기존의 접근법과 달리, 기본적으로 어떤 품목이 금지목록에 명시되지 않는 한 제약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었다. 개혁은 공업과 해외무역의 두 부문에서 진행되었으며, 기업의 무수한 진입제한의 해제와 안보전략 관련된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공공부문의 독점을 해제하고 민간부문에 개방시켰다. 기존의 외환 통제와 서비스 부문 무역의 자유화 역시 경제개혁에 따라 해제되며 외국계 투자자와 민간 부문의 참여 역시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에 인도는 여러 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으나 당시의 정책 수단은 개별적인 단위로 이뤄졌으며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강해 1991년 경제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 성장잠재력의 취약성을 재확인시켜주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인도 경제는 주요 정책의 변화 덕에 대규모 재정적자의 취약성과 금융부문의 개혁의 부진의 문제가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점진적 자유화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심어주며 1990년대의 개혁 이후로 인도는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7% 내외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IT 및 관련 산업의 고속성장세의 지속과, 인도 국내의 IT산업이 낮은 인건비와 높은 교육수준 등의 이점 등을 안고 높은 경쟁력을 띈 점이 컸다.

경제 성장, 1998년 핵개발과 더불어 최소 2억 이상의 억 단위 중상층 거대 소비시장을 거느리게 된 인도는 그러한 경제적 요인들로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21세기로 접어들며 미국. 중국, 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인도와 관계증진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그로 인한 국제정치계의 새로운 세력균형 모색을 위한 배경 또한 깔려 있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인도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토안보,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와 국제적 위상의 강화라는 5대 목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의 발표와 제2차 이라크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의 정세 불안과 같은 국내외 정치적/경제적 판도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5대 목표와 더불어 인도의 대외적인 경제정책을 정세에 발맞춘 변화를 일으켰다. 인도의 이러한 대외관계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신 비동맹정책은 동방정책으로 구체화되어 2003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정책의 수정과 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로 이어졌다. 당시 인도 연방정부를 이끌던 BJP는 힌두 민족주의를 고취와 인도의 강성대국화를 꿈꾸며 주변국과의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동방정책의 진행은 FTA와 같은 제도적 틀 내의 동아시아 내 개별 국가들과의 맞춤형 경제협력과, 경제 성장을 따라 증가하는 에너지 소요의 충당을 맞추기 위해 에너지 안보구축을 외교정책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2003년 유럽연합 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여타 국가로부터 정부 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소액 지원국들에게서 들어오는 소소한 수준의 ODA 자금은 그 액수에 비해 집행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유였다. 여기에는 행정적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과 더불어 2002년 구자라트 내 힌두-무슬림 간의 대규모 폭력충돌에 대해 소액지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인도를 비난한 것에 대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인도의 처사이기도 했다. 이런 정치적 배경 외에 인도가 ODA의 선택적으로 수여하기로 한 결정에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꾸준히 달성해온 8%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서 비롯된 경제적 자신감 역시 작용했다. 인도가 경제적 자신감을 필두로 대국으로서의 책임감과 국제사회에서의 엄연한 주일원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며 표명한 것에는 UN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UNMDG의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쉽 구축'의 목표가 있었다. 해당 목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채를 탕감해주는 대신 선진국의 국제 원조 개발금의 증액을 요구했으며, 인도는 HIPC의 부채 탕감과 ODA를 선택적으로 수여하는 대신에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ODA를 증액시켰다. 여기에는 중국이 대 아프리카 원조를 강화하며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뻗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수정한 인도의 ODA 정책은 자존심을 내세운 대외경제정책의 추구는 2004-05년 쓰나미 및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원조를 거부하고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에 구호단을 파견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인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메시지를 확고한 의지로 보내고자 UN 분담금을 2002년 185,900,000 루피에서 2004년 279,900,000 루비로 약 50% 가량 증액시켰다. 인도가 선택적인 ODA 수여를 결정한 것에는 기존의 인도 정부가 ODA를 수여하고도 이를 부지매입/장비구입/이주 및 정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부족한 현실적인 원인 또한 존재했다. 행정적인 체계의 미진함, 주정부의 무능력, ODA 프로젝트를 통한 인

프라건설을 실현시킬 인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ODA를 받고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인도 정부는 ODA 정책의 수정으로 일부 국가들에게서 축소된 규모의 ODA를 받기로 했음에도 가능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형태의 지원을 선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1세기 들어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의 지지부진으로 인해 FTA를 중심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 맞춤형 대외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고, 인도 역시 미국, 싱가포르와 더불어 FTA 중심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구하면서 선도 국가로 나섰다. 이는 1991년 경제개혁 단행 이전에 기본적으로 네루식 사회주의 정책을 고수하며 대외경제협력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인도가 21세기 들어 변화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탈냉전의 여파는 세계화와 자유화, 지역블록화의 현상을 도래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인도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WTO창립 회원이기도 했던 인도는 다자간 무역협상이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합치하지 않자 주변국과의 맞춤형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었다.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네팔, 아프가니스탄과 FTA를 체결한 인도는 이후 태국,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과 연이어 FTA를 체결하며 더 많은 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준비하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인도가 수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 경제협력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맞춤형 경제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여긴 것과, 여러 전략적 차원의 이유 또한 가지고 있다. 제조업이 약세고 서비스업이 강세인 자국의 산업구조 특성을 살려, 인도는 제조업 시장 개방의 최소화와 투자/기술 협력을 달성하고 비교우위를 지닌 IT/금융/엔지니어링 등 서비스 협력을 극대화하는 위한 FTA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단순한 제조업 상품교역을 넘어 자국의 투자/기술 협력 및 인력 이동을 모두 포함한 서비스 산업까지의 경제 협력을 추구한 인도는 FTA보다 CEPA/CECA(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 한국/일본/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와 CECA/CEPA를 체결함으로서 자국의 약점을 보완하며 강점을 살릴 수 있어서이다. 두 번째는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개방 의지와 산업 경쟁력의 강화이다. 2000년 첫 예산안의 발표에서 세계 경제 내 인도의 역할 강화와 제2세대 경제 개혁을 위해 인도 정부는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명시한 바 있다. 이런 강력한 개방 의지와 함께 정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인도 전체 산업 구조 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았던 탓에 8%대의 경제 성장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여겨 수출 증진을 꾀하고자 한 까닭이다. 수출산업의 육성과 수출의 다변화를 위해 수출을 중요시한 인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2004년 대외무역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FTA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무역을 발전시킴에 따라 GDP의 대외무역 비중을 높이고 세계무역에서 인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동방정책으로 구체화된 신 비동맹정책의 일환으로서 인도는 궁극적으로 FTA를 통해 인도와 주변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권에 편입/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는 인도가 일본 등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을 제외하고 파키스탄이나 중국과의 FTA/CECA/CEPA 체결에 유독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ODA, FTA과 함께 인도가 대외경제정책에서 중요히 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는 21세기 들어 인도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의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중동의 정세 불안과 급성장한 중국의 막대해진 에너지 소비량, 높은 유가의 배경 속에서 인도는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에너지 문제를 언급한 데에는 안정적인 에너지의 확보가 곧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며, 소득의 증가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 본래 2030년에 다다라 14억 인구를 돌파할 것이라 예상한 기존의 예측은 빗나가 예상보다 8년 정도 이른 2022년에 그 선을 돌파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도 경제가 8%대의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위해선 2011년 기준 11억 명이었던 인구의 에너지 소비량의 4배에 맞먹는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인도가 주 에너지원으로 삼은 석탄과 석유는 2003/04년 기준 각각 약 51.7% / 36.39% 였으며, 2031-32년 무렵에는 석탄 44.76%, 석유 23.86%로 그 의존성을 줄이고 가스 22.71%와 원자력 6.31%로 그 비중을 대체할 것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석탄을 제외한 여타 에너지 자원의 매장량이 턱없이 부족한 인도로서는 석유의 경우 그 의존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심각할 따름이며, 이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는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의 확보와 해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산업은 세계적인 추세로 식량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개발을 보류했고 시추선과 같은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은 민간 차원의 투자 및 유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특별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원자력 에네지 부문은 2007년에 미국으로부터 산업용 핵시설 연료와 기술을 제공받기로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러시아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등 원자력 에너지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에너지원 확보는 인도 측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적극적으로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얀마/수단/짐바브웨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실하게 자원의 확보를 위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미얀마/수단/짐바브웨와 같은 국가의 경우 여러 정치나 인권 및 여러 국제법 위반과 같이 상당한 논란을 안고 있는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발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UN 결의안 등에서 그들과 뜻을 함께하기도 했다. 중앙아시아와는 '연결정책'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인적 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맺고자 하는 사이이다. 여기에는 소련 시기의 러시아에 의한 중앙아시아의 지배 이후 단절된 양 지역을 다시금 연결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지도 담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중앙아시아와 인도가 지대한 교류를 맺었던 배경 또한 작용했다. 지리적인 특성상 유라시아 한 가운데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제국의 강대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있었던 16-19세기를 제외하면 외부 세계, 그 중 인도와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할 정도로 밀접한 교류 관계였다. 중앙아시아가 침체기에 있었던 16-18세기에도 상업적/문화적인 접촉은 여전하여, 당대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가 둘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음에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양 측의 교류는 지속될 정도였다. 양 측이 단절되었던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으로서 둘의 관계는 국제적 정세와 위상의 변화로 상호 보완적, 호혜적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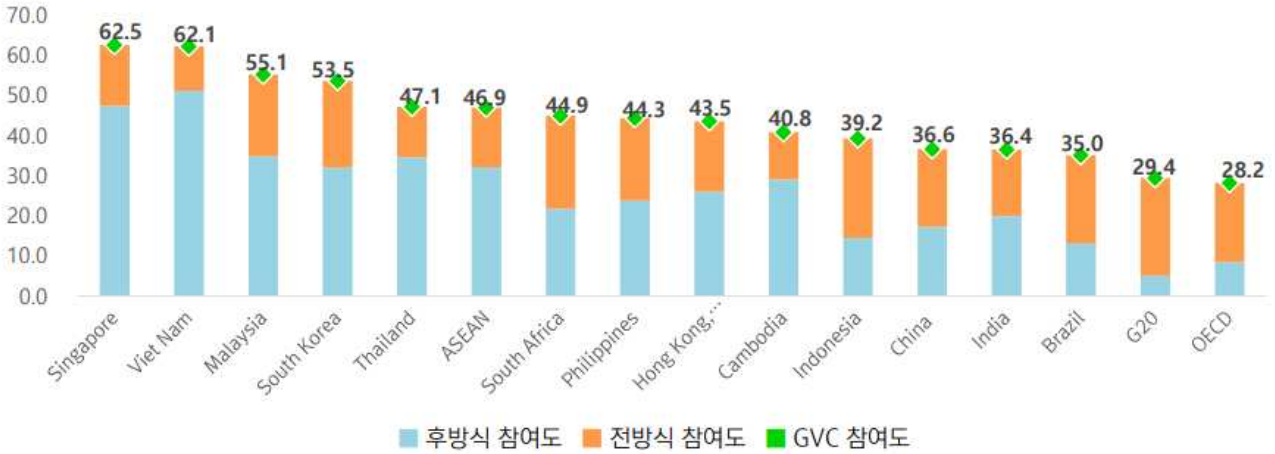
본론 1.2 세계 벨류 체인에서 중간 공급망 국가의 딜레마 축적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은 국가 간의 생산 분업을 통한 세계 교역의 신장과 생산성 향상을 이룸으로써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제품의 설계와 부품,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각 국가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제를 일컫는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간 단계이자 부가가치가 낮은 단계인 조립과 생산을 담당하는 중간 공급망 국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상 국가로 살펴보고 있는 인도가 그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들파워(middle power)라는 개념도 존재하는데, 이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지만, 중견국, 중간국, 중개국의 개념을 지칭할 때 쓰인다. 즉,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 강대국 위주의 안보 이슈가 쇠퇴하고, 인권이나 환경, 테러 방지 등의 국제사회의 관심사 안에서 틈새 외교로 초강대국이나 강대국 사이에서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간자적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하지만 강대국의 안보, 경제 갈등이 첨예화 되는 작금의 국제정치 상황은 미들파워 국가들의 지정학과 외교 전략적 측면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지역 강국들인 중간 공급망 국가들의 포섭 여부가 강대국의 세력권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전 방위 경쟁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미들파워의 의미와 그 포지셔닝이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등장한 미들파워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세력 사이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것이 축적되었는데, 단순한 중견국, 중개국, 완충국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고민하게 되는 적극적인 포지션을 찾아야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전략의 적극성에 따라 지역의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미들파워 국가들의 세력은 1990년대의 틈새 외교 당시와는 크게 구별되는 성격을 지닌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과 중국 양대 세력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 중간 공급망 위치의 국가들은 자국이 지닌 가치와 국가 역량, 지정학적 특성과 국내 정치 동학에 따라 생존 및 번영을 택하는 방법도 각기 다른 복잡성이 갈수록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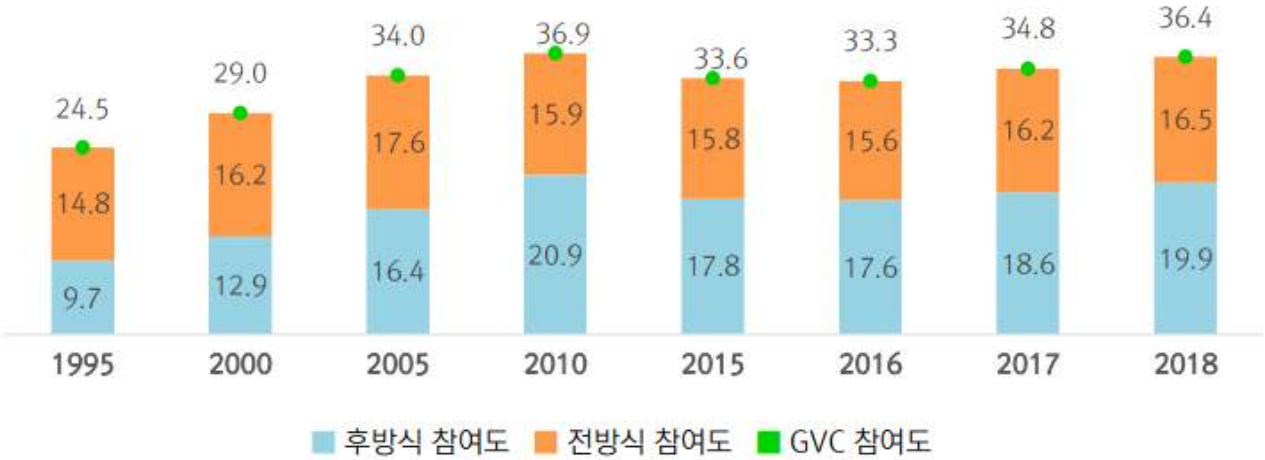
이러한 미들파워 국가들이 지니는 딜레마에 대해 좀 더 시장경제 측면에서의 관점에서 말하는 한 용어를 소개하자면, 중간지대의 딜레마(middle-range dilemma)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공급업체가 심하게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거래관계를 비교적 용이하게 단절할 수 있지만, 중간단계일 경우에는 관계를 끊거나 주문 물량을 조절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공급업체가 노동 규범을 향상시켰을 때 제공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반대로 공급업체가 노동 규범을 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렇게 노동 규범 위반 시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중간 공급망 국가들이 취하는 딜레마적인 고민의 결이 상위의 논의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현재 세계무역과 국제금융시장 전체의 3분의 2가량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최종재의 제조를 위한 생산 작업이 세계 각국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다. 인도 정부가 2027년까지 상품 및 서비스 부문 각각에서 1조 달러씩의 수출액을 달성하겠다는 중기 목표를 세운 바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도를 높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군더나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인해 공급망 탄력성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으며, 인도 뿐만 아니라 각국이 타국의 무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방식을 재평가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대체로 국가들은 글로벌 가치사슬 접근방식을 후방식 참여와 전방식 참여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이 중 후방식 참여는 국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자국의 수출에 활용하는 방식을 말하고, 전방식 참여는 자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타국 수출로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전방식과 후방식 참여도를 모두 합해서 계산하고, 상품 개발이나 최종재 생산과 같은 고부가가치 부문에서의 수출이 무역 수익에 특히 큰 도움이 된다.



위의 그림을 살펴보면,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처럼 중간재의 수입이 많은 국가들은 후방식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인도네시아나 남아공, 브라질, 우리나라 등과 같이 고부가가치 상품을 타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전방식 참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인도 같은 경우는 다른 주체들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며, 2010년 이래로는 후방식 참여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과 동시에 전방식 참여도도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의 전반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도는 1995년부터 2018년을 거쳐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구체적 양태에는 분야별 차이가 나타난다. 2015년과 2018년의 수치를 비교하는 옆의 표를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 대부분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증가했음을 확인

	후방식 참여도		전방식 참여도	
분야구분	2015년	2018년	2015년	2018년
농업/수렵업/임업/어업	3.4	4.1	0.3	0.3
채광업	15.5	15.4	0.6	0.6
제조업 소계	25.4	28.9	9.9	10.3
- 식음료/담배	7.6	8.7	0.7	0.7
- 직물/의류/가죽류	16.0	18.7	1.1	1.1
- 목재/종이/인쇄	17.1	18.9	0.2	0.2
- 화학물질/비금속 무기물 (계)	34.5	40.7	2.3	2.4
* 코크스/정제석유제품	48.7	59.2	0.4	0.4
* 화학물질/의약품	19.5	20.9	1.3	1.4
* 고무/플라스틱제품	23.2	24.7	0.4	0.4
* 기타 비금속 무기물	20.5	22.9	0.1	0.1
기초금속/금속가공	26.5	25.8	1.1	1.1
컴퓨터/전기/전자장비	23.9	25.7	1.7	1.8
기계장비 및 관련설비	21.3	22.1	0.8	0.8
운송장비	24.1	25.2	1.6	1.7
기계장비 설치/보수	29.0	34.6	0.5	0.5
전력/가스/수도/하수처리/쓰레기처리/정화업	23.5	32.5	0.0	0.0
비즈니스 서비스업 소계	8.0	9.2	4.8	5.2
도매/소매/차량수리업	5.0	5.9	0.9	1.0
수송/보관업	15.0	17.2	1.3	1.3
숙박/요식업	4.5	5.3	0.2	0.3
정보통신업	7.1	7.9	1.0	1.2
금융/보험업	5.5	7.5	0.6	0.6
부동산업	3.1	3.5	0.0	0.0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업	11.0	12.8	0.7	0.8
공공기관/교육/보건/기타 개인서비스업	7.9	8.7	0.2	0.2
총계	17.8	19.9	15.8	16.5

할 수 있는데, 이 중 후방식 참여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코크스 및 정제석유 제품이고, 전방식 참여도는 컴퓨터/전기/전자기기, 화학물질, 의약품 순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는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서비스업 부문의 후방식 참여도가 대체로 증가한 경향도 관찰할 수 있고,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특히 운송 및 보관업계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주었다. 전방식 참여도는 서비스업 부문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보통신업계 등에서 아주 소폭의 상승세가 관찰되었다. 이처럼 자료들을 살펴보면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최종재보다는 중간재의 수출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간 공급망의 위치에 속한 인도의 경제 주권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측에 따르면,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신흥국 평균보다도 떨어진다는 결과도 나온다. 하지만 친기업환경 개선에 더해 낮은 인건비와 최근 점증적으로 시작된 인프라 개선 구상 등이 이전에 비해서 우호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해나가면서 인도가 글로벌 주요 가치사슬 참여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의 중점이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이러한 중국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현재 인도는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제조업 국가로서의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한다면 세계의 다양한 노동집약적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인도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제고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권위를 키워나가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입안 및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중간 공급망 국가로서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향상시키려면 첨단 기술분야의 수출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일텐데, 이 점에서 인도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국내 인프라의 강화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 차원의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산업 연계성 및 물류 인프라 개선, 제도적인 역량 강화, 혁신성 및 수출 비용의 효율을 위한 연구와 개발 투자 증진, 제품의 질 향상과 글로벌 표준 준수, 중간재 수입 의존성 타파와 국내 제조업 역량 강화, 그리고 컨네이너선의 부족과 해상운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항구 인프라 개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물리적인 인프라가 점점 개선될수록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용이해진다. 이 외에도 수출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무관세 수입을 지원하는 사전승인제도와 고부가가치 상품 수

출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을 돕는 수출증진용 자본재 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의 효율적 시행도 인도 정부가 세운 수출 중기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규 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도 인도 국내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원자재 수입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기존에 이미 체결된 무역 협정도 재협상이나 사후 검토를 통해 핵심 원자재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이전보다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품의 생산과정이 전 세계로 분산되어 가는 글로벌 가치사슬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리고, 이는 특히 수출의 다변화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 중간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도도 예외일 수가 없고, 인도 정부가 세운 무역 및 경제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수준을 증가하는 것을 필수 선결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앞서 말했던 상품과 서비스 부문을 합해 총 2조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린다는 중기목표가 이루어지려면, 현재 GDP 내 수출액 비중을 크게 끌어올려야 하며, 아직 빈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지나친 중국에의 의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도 생산기지와 공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투자자들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잠재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인도의 경제 주권 향상을 돕는 요소일 것이다. 중간 공급망 국가인 인도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비단 상술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제고에 한정되지 않고, 이 외에도 역내 비교우위에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체적인 지역적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방안 등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인도가 그동안 축적된 중간 국가로서의 딜레마로 인해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위치가 위태로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나, 인도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에 취해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강도 높은 국내 경제정책의 개혁, 수출 부문에서의 투자친화적 정책 시행,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한 물류체계 및 인프라 개선 등의 다양한 노력을 단행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상품 수출 부문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면, 인도가 생산비용, 제품의 질, 혁신 등 여러 분야에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주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 1.3 대의제의 오작동:
표면적으로는 최대 인구의 민주국가, 후진적인 선거양태

대의제 민주주의가 민주적 제도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국민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반대로 대의제의 오작동이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정에 국민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의 실질적 이득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패와 정치로 인한 사회문제가 팽배해 있다는 것은 대의제의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해 대의제의 오작동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 또한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인도는 2018년 기준 글로벌 부패 지수 순위에서 78위를 기록하며 비대한 경제에 비해 후진적인 부패도를 보여주었다. 국제투명성기수구(IT)인도지부와 소셜 플랫폼 로컬서클스는 인도인 19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최근 1년간 뇌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51%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사람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창설된 공공배급제도에 할당된 곡물 31%와 설탕 36%가 암시장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를 보면 인도의 부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는 인도의 건설과정, 민법체계, 공무원 수입감소, 문맹등의 이유에서 기인한다. 인도 초대 수상 자와할랄 네루는 엘리트들이 국가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와 공무원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부와 공무원들은 부패해졌다. 또, 통일된 민법체계가 없어, 민사소송에 있어 전통법을 따랐고, 그러다 보니 지역유지의 영향력이 막강해졌고, 그들이 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인도 내부의 테러리즘 문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주로 인도 내부 종교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힌두교도가 79.80%, 무슬림이 14.23%인 국가에서 정치권은 80%를 공략하여 네루-간디의 혈통주의를 상대하기 위해 힌두 근본주의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힌두 근본주의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이용되었고, 힌두교도들은 원리주의에 영향을 받아 타 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갖게 되고 무슬림에 대한 폭력과 테러가 자행되었다. 무슬림들은 이에 대해 테러와, 폭력으로 보복했고 이것이 증오의 연쇄를 낳아 인도 내부의 테러리즘 문제를 만들었다. 1991년, 2006년 뭄바이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 여객기 공중납치, 2001년 의사당 테러, 2005년 델리 연쇄폭탄테러 등등 지난 15년간 6만 2천명의 민간인들과 9천명의 치안 관계자들이 테러행위로 사망하고 60만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인도 내 빈곤문제도 심각하다. 인도 내 3억명 이상이 하루 1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 5살 미만 어린이의 45%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다고 세계은행은 밝혔다. 이러한 빈곤으로 인해 교육에 있어서도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맹률이 35%에 이르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했다. 인도 뭄바이의 다라비 빈민촌의 경우 1440명의 주민이 1개의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수준이고, 하수 오염도 심각하고, 수도시설도 부족하여 물을 공급하는 것이 어렵다. 최근에 유행한 코로나 19는 인도내 빈곤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인도정부는 봉쇄정책을 피면서 바이러스 전파를 막았다. 그 과정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었고, 인도 내 빈곤문제는 더욱 심해졌다.

인도 국민 대다수는 부패, 빈곤, 테러리즘 등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바꾸어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제의 오작동으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에서 대의제의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음은 명확하다. 이는 이들이 표면적으로 세계 최대의 민주 국가이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후진적인 선거양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7가지는 인도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1. 대물림되는 정치권력
-인도 사회는 가족과 커뮤니티가 큰영향을 끼친다.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부패스캔들로 물러난 부총리의 부인, 자녀들 모두 활발하게 정치활동중이다.
2. 종교적 집단주의 영향이 있다.
- 인도의 종교는 2011년 기준 힌두교 79.80%, 이슬람 14.23%로 나뉘어진 국가이다.
- 혈통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나타난 힌두 근본주의는 인도 사회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
3. 경제적 발전 성과가 반드시 표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구호로 성공한 빌 클린턴 이후 경제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인도의 역사를 보면 재임기간중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낙선한 사례가 많았다.
4. 국정 운영을 잘하더라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크지않다.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 연장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부는 로티(납작빵)와 같아서 프라이팬 위에서 계속 뒤집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버린다."
5. 카스트가 중요하다.
-인도는 수천개의 카스트로 나뉘어져있다.
-비교적 인구수가 많은 카스트가 정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6. 지역별 맹주가 존재한다.
-인도의 하원 의석수는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의 맹주는 그만큼 총선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어느 정당이 차기 정권을 잡게 되느냐의 핵심은 지역맹주들과 연합을 얼마나 성사시키느냐에 있다.
7. 도시보다, 농촌중심의 선거행태를 갖고 있다.
-인도 전체 인구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여 농촌의 표심이 선거의 향방을 가늠한다.
-환경오염등의 어젠다 보다, 농민부채 탕감, 각종 보조금등 가시적 혜택이 있는 복지정책을 선호한다.

인도인들은 이 7가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투표를 한다. 인도는 이러한 국민들의 표심에 의해 여러 차례 정권교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부패문제, 사회문제를 해결하

지 못했다. 이들의 정권 교체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면 이들의 정치적 선택에 어떠한 제약이 있었다 보기보다 이들의 7가지 요소에 후진적인 요소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첫째 요소는 대물림되는 정치권력, 혈통주의 문제이다. 일명 '네루 왕조'라고 불리는 네루-간디 가문은 인도 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1947년 영국 독립 이후 이 가문에서만 3명의 총리를 배출했고, 37년간 인도를 통치했다. 이 가문에 대해 국민들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낸다. 네루-간디 가문 뿐만 아니라 2009년 총선에서 당선된 30, 40대 젊은 의원의 대부분은 가문의 후광을 업은 2세나 3세였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좋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인물에 대한 검증없이, 오직 가문만을 보고 뽑는 사회에 부패가 만연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일이다. 실제로 네루-간디 가문의 인디라 간디는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 여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도 민주주의에 크나큰 위험을 가져오기도 했다. 둘째는 힌두 근본주의이다. 이는 인도의 혈통주의를 상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온 것이다. 이 정치이념을 갖고있는 정당인 인도인민당이 현재 인도의 정권을 잡고 있다. 인도의 종교는 2011년 기준 힌두교 79.80%, 이슬람 14.23%로 나뉘어진 국가이다. 반 무슬림주의인 힌두 근본주의가 인구의 대부분인 힌두교도들을 자극시켰다. 이들의 살인, 폭력과 테러행위가, 무슬림들을 자극시켰고 이들 또한 힌두교도들에게 복수했다. 인도는 지난 15년간 6만 2천명의 민간인들과 9천명의 치안 관계자들이 테러행위로 사망하고 60만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힌두 근본주의의 등장과 그들의 집권이 인도 국민들을 테러, 폭력에 노출시키고 있음에도 인도국민당이 여전히 집권당 지위를 갖고, 힌두 민족주의자인 나렌드라 모디가 총리라는 점에서 후진적인 선거양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경제적 성과나, 국정운영을 잘 수행했느냐와 재집권을 할 수 있느냐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 인도의 선거를 돌아보면 재임기간중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선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또 인도인들은 한 인물에게 권력을 실어주는 것을 싫어한다. 인도에 통일된 민법체계를 만들고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인도의 표심 자체가 권력을 실어줘야 할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정부는 로티(납작빵)와 같아서 프라이팬 위에서 계속 뒤집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버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즉, 경제적 성과, 국정운영 수행을 잘하여 능력을 증명한 사람에게도 권력을 실어주지 않아 이들이 장기적으로 인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만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넷째로는 카스트 집단주의다. 카스트로 나뉘어진 집단 구분이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는 인구수가 많은 카스트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즉, 낮았던 카스트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힌두교도 기준으로 달리트(불가촉천민)가 16%, 수드라(공인)가 25%로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이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다보니, 이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많아지고, 이들의 일부는 기득권자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맹목적 집단주의적 행태는 민주주의 체제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민전체의 이득을 대변하지 않고, 특정 카스트 집단만을 위하여 행하는 정치 활동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를 만들어낸다. 다섯째로는 지역별 맹주가 존재하고 이들이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다. 인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5년마다 치러지는 총선에서 하원의 의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 또한 지방 29개주의 연방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별로 매년 다른 시기에 선거를 치러 지방정부를 구성한다. 이 주정부의

입법기능을 촌락회의가 담당하는데, 이것을 '빤따야지 라즈'라고 부른다. 인도에는 통일 된 민법체계가 없어, 전통법을 따르다보니 자연스럽게 입법과정에 지역유지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 '빤따야지 라즈' 라고 하는 체계도 자연스럽게 지역유지의 영향을 받고, 그 안의 파벌싸움, 줄서기, 부패 문화를 보면 이 입법 기능이 지역유지 아래 예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인도의 부패문제를 더 심화시킨다. 마지막으로는 인도의 낮은 정치의식수준이다. 2019년 인도 총선을 보면 제 1야당인 인도국민회의의 총재인 라훌간디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장했고, 모디총리는 20조원규모의 농민지원안 검토, 대형인프라 건설등 각종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쏟아내었다. 또, 이러한 포퓰리즘적 공약들에 홀려 모디 총리의 힌두 원리주의가 가지는 폭력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를 지지하고 있다. 낮은 정치의식 수준은 많은 수의 빈곤한 이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는 문맹률 35%에 달하는 수치로 나타난다. 낮은 교육수준은 인도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도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아서 이들이 정치인들의 집단주의 행태나 포퓰리즘적 행태에 비판적인 생각을 견지하지 못하게 되고 국가에 진짜 필요한 하수오염 해결같은 정책보다 부채 탕감, 각종 보조금등 가시적 혜택이 있는 복지정책을 선호하여 포퓰리스트들이 판치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인도는 표면적으로는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나, 내부적으로는 그들의 표를 결정하게 하는 요소들에 혈통주의, 힌두근본주의, 카스트집단주의, 변화주의, 지역유지, 낮은정치의식등의 후진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이것이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후진적인 선거양태를 보이게 만들어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대의제의 오작동이 일어나 그들의 사회 내부의 빈곤, 테러, 부패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론 2.1 '모디노믹스'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인도의 모디 총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성공하여 모디 집권 1기부터 추진해온 모디노믹스(인도의 경제정책)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모디노믹스는 1971년 인디라 간디가 총선에서 사용한 '가리비 하타오'(빈곤 퇴치) 이후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경제 슬로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디노믹스는 크게 4가지 하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메이크 인 인디아 2. 디지털 인디아 3. 스킬 인디아 4. 클린 인디아가 모디노믹스의 주요한 하위 정책이다. 메이크 인 인디아는 제조업 육성의 의지를 정책화한 것이며, 스킬 인 인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인 인도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고용하겠다는 의지를 정책화한 것이다. 또한 디지털 인디아는 it분야의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클린 인디아는 '농촌'의 환경 개선부터 시작하여 농촌의 전반적인 진흥을 의미한다.

모디노믹스의 대표적 핵심 정책은 메이크 인 인디아이다. 모디의 집권 이전인 2013년 10월~2014년 6월까지 9개월 간 FDI(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189.4억 달러였던 반면 집권 직후 9개월 동안은 257.5억 달러를 기록하며 35.9% 상승률의 기염을 토했다. 이후 FDI 유입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2020-21 회계 연도 동안 총 FDI 유입은 580 억 달러로 2019-20 년의 첫 8개월에 비해 22% 증가했다. 2020년 4 월-11 월 동안의 FDI 유입은 $ 43.85 억으로 2020 년 4 월-11 월 ($ 32.11 억)에 비해 37 % 증가했다. 또 하나의 인도 성장을 가시화하는 주요 변인으로는 경제성장률을 꼽을 수 있다. 모디 총리의 재선에 결정적 변인으로 작용했던 경제성장률은 거의 모든 국가가 역성장하는 2022년에도 순항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4.8%(YoY)였으며, 22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4.0%(YoY)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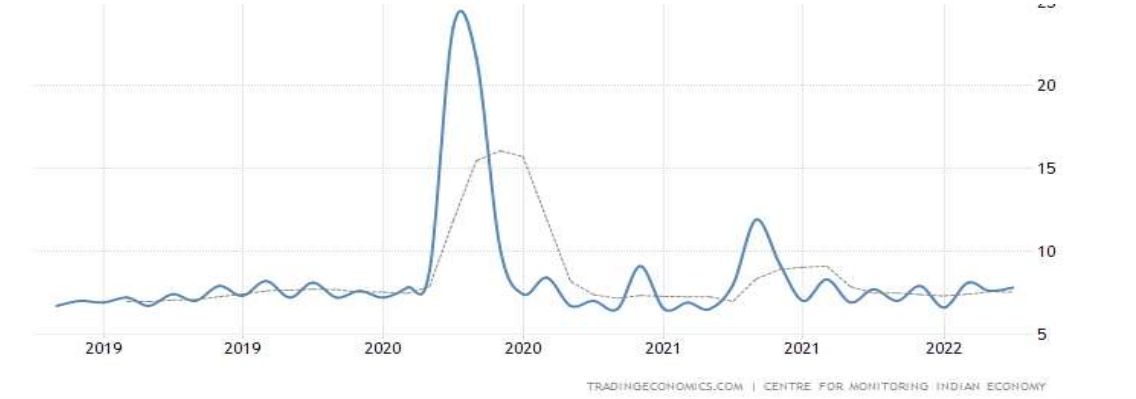
소폭 하락했으며 결정적으로 3월 중순 선전, 상하이 등 항구도시를 전면 봉쇄함으로써 IMF는 22년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2.3%(YoY)로 조정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22년 초에 22년 경제 성장률을 5.6%로 전망한 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반면 인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및 곡물, 농산물 공급망 혼란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인 8%대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기관별 FY 2022-2023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명	최신 전망치	기존 전망치
IMF(www.imf.org)	8.2	9
World Bank(www.worldbank.org)	8	8.7
RBI(www.rbi.org.in)	7.2	7.8
Fitch(www.fitchratings.com)	8.5	10.3
Morgan Stanley(www.morganstanley.com)	7.9	8.4
Deloitte(www2.deloitte.com)	8.3-8.8	8.7-9.2
Citigroup(www.citigroup.com)	8	8.3
ICRA(www.icra.in)	7.2	8

[자료: 각 기관 발표]

경제성장률과 FDI 등 전반적인 인도의 성장 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디의 3선은 불확실하다. 2004년 당시 바즈파이 정권이 10%의 고도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총선에서 패배한 바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 속사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성장의 인도'가 실질적으로 인도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을까? 이는 실업률을 들여다봄으로써 인도의 성장이 국내 전반에 긍정적 작용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인도	마지막	이전	단위	참고
실업률	7.80	7.60	퍼센트	Apr 2022

+

인도 - 실업률

현재 값, 이력 데이터, 예측, 통계, 차트 및 경제 달력 - 인도 - 실업률.

실제	이전	최고	최저	날짜	단위	업데이트 주기
7.80	7.60	23.50	6.50	2018 - 2022	퍼센트	매월

인도의 실업률을 들여다보면 모디 총리의 집권 1기 당시 인도의 실업률이 4% 내외였으며, 2기(2019~)에 접어들면서 실업률이 7% 부근까지 점증했고,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당시 실업률이 23.60%까지 폭증한 바 있다.

교육수준	공식 정규직	비공식 정규직	자영업	임시직	총합
문맹	2.29	11.79	25.70	37.41	24.30
정규교육 없이 문해	0.04	0.19	0.43	0.50	0.38
초등교육 이하	1.25	3.90	5.67	8.03	5.56
초등교육(1-5년)	3.28	12.66	14.20	18.14	13.88
중등교육(6-8년)	10.52	23.57	22.46	21.72	21.28
이차교육(9-10년)	10.99	15.00	12.99	8.90	12.09
고등이차교육(11-12년)	20.16	14.79	10.06	4.24	10.30
대졸과 대졸 이상	51.48	18.09	8.51	1.06	12.22
총합	100	100	100	100	100

2018-19년 기준 교육수준별 노동자들의 일자리 형태 분포 (단위: %)
출처: Kapoor 2020b: 3

이는 인도 국민들의 일자리 분포를 들여다봄으로써 당시 팬데믹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던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인도의 '정기 노동력 조사'(Periodic Labor Force Surveys,PLFS) 2018-19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24%가 임시직이며, 자영업자가 52%를 차지했다. 그리고 1/4 정도만이 정기적 임금을 지급받는 정규

직 노동자였는데, 이들 중 사회보장보험에 하나 이상 가입된 비율은 40.6%였으며 이들 중 모든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된 비중은 17.7%에 불과했다. 전체 노동자 중 4.2%만이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 중 42%는 중앙 정부에서 제시한 월 146,500원(2021)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의 2011-12 통계치와 2017-18 통계치를 비교하면, 일자리가 6600만 개가 사라졌음이 확인됐는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이러니를 남겼다. 인도의 실업률은 2020년 5월 최고치를 기록하고 급히 조정되고 있다.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나 당시 일용직 근로자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총 1억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실업률은 21년 4월을 기점으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년 3월부터 농촌의 실업률이 21년 4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4월 4일 8.58%, 4월 11일 8%, 4월 18일 7.31%로 하락했으며 도시에서의 실업률은 농촌의 실업률과 반대의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당시 코로나 재확산세에 대한 우려로 상당수의 공장이 봉쇄령에 의해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했기에 도시의 실업률이 폭증했으며, 농촌의 실업률 회복 추세는 도시에서 귀농하는 인구의 증가 하는 등 취업 기회를 찾지 못한 이들이 산업화의 역행을 형성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인도 노동시장에서 비공식노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제조업'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는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확산세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5월 12일 인도의 중앙 정부는 '자립 인도'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2014년 모디 집권 1기의 초창기부터 추진해온 "made in india"(제조업 육성책)과 각종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메이크 인 인디아의 25개 육성 산업은 내수 경기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케 하는 전자·가전, 자동차 및 부품, 의류·섬유 등 11개 분야와 10개의 건설·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분야(기계·철도, 항공, 선박·항만, 오일·가스, 화학, 신재생 에너지 등)과 4개의 첨단 기술 산업 분야(IT·우주, 국방시설, 생명공학)로 구성된다. 연간 제조업 부문의 12~14% 성장을 목표로 하여 2022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1억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2년 2월 13일 WSJ(월스트르릿 저널)에 따르면 인도 총 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3%p 증가한 45.6%에 달하며, 농업의 GDP 기여율은 1/5에 못 미치는 저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인도 아쇼칸대학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최근 4년 간 절반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비농업 고용 부문에서의 인력 이탈은 장기적으로 인도 경제 성장에 장애될 수 있다는 점을 인도 정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토시 메흐로트라(前인도 국가계획위원회 수석)은 "농촌 노동력 증가는 개발도상국이 원하는 그림과 반대"이며 "인도 정부가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생산적인 비농업 일자리로 복귀시킬 수 없다면 성장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발도상국 도시화와 빈곤에 관한 실증적 연구」(빙설아, 2019)은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의 37년 간 도시화율의 변화에 따라 1) 1인당 GDP, 2) 빈곤율(2018년 기준 소득이 하루 1.9$ 미만), 3) 지니계수의 추이를 비교 분석했다. 107개 표본의 분석 결과, 도시화율이 1% 증가할 때 1인당 GDP는 1.33% 증가했으며, 국가 전체의 빈곤율은 1.36% 감소했다. (도시 빈곤율이 2.49% 감소한 반면 농촌 빈곤율은 0.9% 감소했다.) 도시의 지니계수는 도시화율 1% 증가할 때마다 0.0005만큼 증가하여 불평등이 다소 증가했고, 농촌의 지니계수는 0.0034만큼 감소하여 불평등 감소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중국의 도시인구 비율은 57.96%이며, 인도는 33.6%, 인도네시아는 54.66%이다. 2022년 기준 인도의 도시인구 비율은 35.9%이며 5년 간 6.8% 상승했다. 중국은 5년 간 도시화율이 9.6% 상승한 63.6%이다. 인도네시아는 5.8% 상승하여 57.9%이다. 아시아 내 인구가 가장 많은 세 국가의 도시화율을 비교하면 그 증가 추세에 있어 인도가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인도의 도시화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세계 평균은 55%) 물론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 불평등과 빈곤층이 양산되어 도시화가 빈곤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Todaro, 2016) 또한 거대도시로의 집적이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를 넘어선 이후부터 환경문제와 주택문제, 교통문제 등 도시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제성장을 발생할 수도 있다. (williamson, 1965)

그렇지만 도시화가 농촌빈곤의 탈출 기회로서, 농촌을 떠난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에 남아있는 이들의 생활수준 향상에도 기여하여 2차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면서 도시화는 국가 전체적 빈곤의 감소를 유도한다. (Ranallion et al, 2010) 이를 위해 도시화 진행 중 빈곤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빈곤함정에 빠진 극빈곤층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빈곤층의 분포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도 통계청 산하 전국표본조사실이 2019년 수행한 전인도부채및투자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의 상위 10%가 전국의 실물 자산 중 과반을,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1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도 상위 10%는 도심 지역 자산의 55.7%, 지방은 50.8% 소유) 그리고 인도의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인구 2/3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는데, 농촌 지역 중 '델리'가 가장 양극화가 심했고, 상위 10%가 80.8%의 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 50%는 총 자산의 2.1%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파키스탄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펀잡' 주는 상위 10%가 65%의 부를 소유했으며, 잠무 카슈미르 주의 경우 상위 10%가 32%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비교적 양극화 수준이 낮았다.
제조업 위주로 국가 발전 원동력을 갖추고, 도시화율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촌의 빈곤율까지 동시에 개선하려는 인도 정부의 수년 간 노력이 코로나로 인해 몇 달 만에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중 약 70%가 빈곤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율이 점차 개선되다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인도 정부는 농촌의 상황을 변혁시키기 위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식량안보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완화시킬 것을 약속했지만 가난한 이들을 모두 구제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특히 22년 인도의 정부 예산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에 충실한 점도 있으나, 식품·석유 보조금이 지난해 예산 대비 26% 삭감되어 빈곤층의 고통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작년의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올해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인도 정부가 (청소년과 여성, 농민과 하층 카스트를 위한) 포용적 복지와 디지털 경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빈곤층과 극빈층을 단 번에 구제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가난한'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FDI의 증감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도시 역량을 대폭 증강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고질적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공작이 필요할 것이다.

본론 2.2 모디의 '힌두국가'

힌두 민족주의가 본격적인 정치세력으로 중앙무대에 등장한 것은 9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인도의 외교·경제정책에서 전면적인 전환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힌두 민족주의는 인도 독립운동이 거세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극우 힌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1925년 RSS(국가참여협회)가 창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Hindutva(힌두성, 힌두원칙)를 강조하며 무슬림, 영국인들 등 이민족들의 부당한 지배에 의해 단절된 힌두인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들에게 인도 민족주의는 힌두 민족주

의로 등치되었고 제국주의 영국의 퇴출과 함께 소수파로서 오랫동안 인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무슬림들까지 제거된 순수한 힌두 국가의 설립을 목표로 하였다. 독립 직후에 간디의 암살에 연루되어 동력을 많이 잃은 후에도 강경 민족주의 주장을 멈추지 않았고 70년대 인디라 간디 세속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면서 서서히 부활하였다. 90년대 초 이들이 득세하게 된 것은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오랜 숙원이던 아요다(Ayodha) 시의 바브리 모스크(Babri Mosque)를 전국적인 캠페인 끝에 파괴하는데 성공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시작된 경제 자유화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빈부격차 증대 등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각 지방정부가 한정된 자원과 권력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강경민족주의와 종교, 카스트 간의 갈등에 기반을 둔 힌두 민족주의의 성장이 오히려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힌두 민족주의의 득세는 공고했던 국민회의당의 아성을 깨고 90년대 말 인도인민당이 집권에 성공하게 하였고 바지파이 총리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98년 5월 핵실험을 강행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인도인민당은 이후 국민회의당에 다시 정권을 내주었다가 2014년 총선에서 국민회의당의 실정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 그리고 구자라트(Gujarat) 주 총리로 재임시 상당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혁혁한 경제발전 성과를 보여주었던 나렌드라 모디 당수의 인기에 힘입어 승리하면서 정권탈환에 성공하였다. 2019년 봄에 치러진 총선에서 인도인민당이 재차 압승을 거두면서 모디 총리는 집권 2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비록 국민들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최근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된 경제 분야에 있지만 인도인민당 특유의 강경한 외교안보, 사회문화 정책도 힌두민족주의자들을 비롯한 지지층에게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모디 총리는 이미 구자라트의 총리로 재임하던 2002년에 힌두 민족주의자들과 무슬림 주민들 간의 충돌로 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휘하의 경찰병력이 힌두극우파들의 무슬림들에 대한 폭력과 학살을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조장하였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모디 총리의 비힌두 주민들과 하층 카스트들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취임 초기부터 크게 문제시되었다. 인도에서의 권위주의로의 회귀는 소수그룹에 대한 차별, 박해 강화, 사법부의 독립성 약화, 언론의 독립적 기능 상실 등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환은 모디 정부가 인도를 힌두 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외교분야에서는 강경 힌두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정치 분야는 달랐다. 모디 정부의 권위주의화 경향과 무슬림들을 비롯한 소수파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 본격화된 것이다. 특히 2019년에 발생한 인도 정부의 카슈미르 지위 박탈 헌법 개정과 아삼(Assam)주를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국가시민명부 강요가 대표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책이다.

1947년 인도-파키스탄 분리 독립 직후에 수백 개의 번왕국(princely states)들은 인도와 파키스탄 두 국가 중 하나로의 귀속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인구 다수가 무슬림인 카슈미르의 힌두 왕은 독립 유지를 꾀하다가 파키스탄의 후원을 받는 반란군의 습격을 격퇴하고자 인도에 도움을 청하였고 네루 총리가 카슈미르의 인도 귀속을 약속해야만 구조하겠다는 확약 후 인도군을 파견하여 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벌어졌다. 이 전쟁은 뚜렷한 승자 없이 카슈미르를 양분하여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Jammu Kashmir)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로 양분되었고 두 지역

사이에 휴전 결과에 따라 모호하게 설정된 통제선(Line of Control, LOC)이 국경선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카슈미르는 한반도와 맞먹는 크기에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의 사이에 자리 잡은 전략적 요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인도, 파키스탄 양국은 결사적으로 카슈미르를 차지해야 하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적 필요를 갖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 아대륙(subcontinent)의 무슬림들을 위한 '민족'국가를 건설한다는 '두 민족 이론'(Two Nations Theory)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이기에 주민 절대다수가 무슬림인 카슈미르를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인도의 경우에도 다양한 종교, 민족을 포용하는 다원주의적, 세속적 민주주의의 표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카슈미르 문제는 협상불가의 이슈인 것이다. 따라서 1차 전쟁 이후에도 양국은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두 번의 전쟁을 더 치르고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였다. 인도 정부의 권위주의화, 중앙집중화 시도에 맞서 1990년 전후에 거의 내전 상태에 준하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고 인도령 카슈미르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가 인도 의사당, 뭄바이 등에 대한 테러공격을 감행하면서 카슈미르는 해결책이 뾰족하지 않은 인도 정부의 아픈 손가락으로 계속 남아 있다. 인도가 통제하는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여전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와 저항, 치안기구의 강력한 대응, 폭력의 증가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2016년 여름 젊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부르한 와니(Burhan Wani)의 사망은 카슈미르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욱 강력한 저항을 촉발시켰다. 이후 어린 소년들까지 적극 가담하면서 인도 치안당국에 대한 저항이 여전히 계속되었다. 1947년 분할 이후 2018년까지 대략 9만 명 정도의 인명이 카슈미르에서 희생되었다고 알려진다.

카슈미르를 둘러싼 양국의 대결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치열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이 극도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악화에는 지역 무장단체의 비호와 후원을 통해 카슈미르에서의 현상 타파적 숙원을 달성하려는 파키스탄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카슈미르 주민들의 인도에 대한 저항이 격렬해진 데에는 파키스탄의 책임이 분명히 크지만 강압적인 통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도외시한 모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파키스탄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힌두 민족주의 정당 출신 모디 정부의 강경 정책이 카슈미르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에 불을 지피면서 카슈미르를 들끓게 한 것이다. 무장단체에 의한 공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무장단체 소탕과 치안수복이라는 미명 하에 인도 경찰, 군 병력의 권력 남용과 무리한 경찰력 집행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에 발간된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서는 이 지역의 군대 특별 권한법(Armed Forces Special Powers Act, AFSPA)과 공공안전법(Public Safety Act, PSA)의 오용이 군과 경찰에 의한 권력남용과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기소를 힘들게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렇게 카슈미르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치안 병력 사이에서 보복과 폭력의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9년 5월 총선에서 압승한 후 2기를 시작한 모디 정부는 안보와 국가우선을 내세우면서 카슈미르의 경우 8월 5일 인도 정부가 인도 통치 카슈미르에 특별 지위를 부여했던 인도 헌법 370조를 박탈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1947년 당시 카슈미르의 지도자였던 하리 싱(Hari Singh)이 인도의 네루 총리와 맺었던 가입

조약(Instrument of Accession) 이후 헌법 370조를 통해 국방, 외교, 통신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았고 카슈미르 주민들은 지역 내 직장, 주택구입, 교육 등에서 특혜를 인정받았으나 이제는 그러한 지위를 잃고 연방정부의 직할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잠무, 카슈미르와 라닥이 분할되어 두 개의 연방직할영토(Union Territory)가 되었다. 이는 잠무-카슈미르가 가진 헌법상 예외 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주장하던 인도인민당 강경파들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총선 압승으로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모디 정부가 일부 우려에도 밀어붙인 것이다. 모디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에 대한 카슈미르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었으나 인도 정부는 35,000명의 군 병력을 추가 투입하고 통금과 함께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여 확실한 통제와 단속에 나섰다. 인도인민당 정부와 국민의용단(RSS) 등 정부를 후원하는 강경 힌두단체들은 지역의 테러 위험이 있다며 자치권 박탈과 함께 계엄령에 가까운 강압적 통치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정치인들과 사회운동가들을 체포하거나 가택연금에 처해 인권 침해 논란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 지위 하에서 지역 주민들에게만 허용하였던 카슈미르 내 재산 취득을 비주민, 혹은 이주민들에게도 허용하면서 2014년 이후 지속되었던 인도 연방 내 유일하게 무슬림들이 다수인 이 지역의 '힌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인도의 힌두계 주민들은 대체로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역사적 필연성이라기보다는 불공정한 특혜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였기에 이번 자치권 박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소수 그룹의 권리침탈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행해지는 이러한 힌두민족주의의 강압적 팽창정책은 모디 정부의 권위주의화 경향에 대해 더 우려하게 만든다. 또한 잠무-카슈미르와 중국에 근접한 라닥을 분할하여 두 개의 연방 직할 영토로 규정하였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파키스탄과 중국에 각기 다른, 더욱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회의적인 시각이 더욱 팽배하였다. 이러한 강압조치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의 악순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더욱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카슈미르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의 양적 팽창과 공격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카슈미르의 불안정한 역사와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는 카슈미르 기반 무장단체의 행적을 고려할 때 테러 공격이나 대규모 시위 등의 불안정 상황이 언제든지 초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인도인민당 정부는 '국가 우선' 미명하에 전통적인 인도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연방 정부의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중앙 집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모디의 다양성 말살과 소수 그룹 냉대 정책은 카슈미르의 헌법상 특별지위 박탈 이전에 이미 인도 동부의 아삼(Assam)주에서 시작되었다. 수년간의 준비 끝에 2018년 7월 30일 인도 정부가 국가시민명부(National Register of Citizens NRC) 관련 새로운 제도의 초안을 발표하면서 아삼주에서 불법이민자들을 색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가시민명부는 인도 독립 직후인 1951년 인구센서스와 함께 도입되었으나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적은 거의 없었다. 모디 정부가 인도에서 가장 종교적 다양성이 강하다는 아삼주를 타깃으로 한 주요 이유는 이 주의 3천 2백만 주민들 중 3분의 1이 무슬림으로 카슈미르 다음으로 무슬림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전후로 아삼주를 비롯한 서벵골 지역에는 많

은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들이 불법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 이주에 대한 기존 힌두 주민들의 반발과 시위도 끊이지 않아서 1985년에 수백 명이 사망한 거센 시위를 계기로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1971년 3월 이후 정당한 서류 없이 아삼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고 규정하기로 연방정부와 시위대 간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방글라데시로부터 아삼을 포함한 인도 동북부 지역으로의 불법이민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면서 문제시되었다. 현재 대략 4백만에서 천만 명 정도의 불법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거주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하층민이 다수인 무슬림계 주민들은 설령 수 세대에 걸쳐 이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찾아서 증빙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1971년 3월 이전부터 아삼주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한 주민들만 명부에 포함되는데 빈곤한 무슬림들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4백만 명에 달하는 주로 무슬림 주민들이 무국적자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정부와 함께 아삼주 정부도 통치하는 인도인민당은 이렇게 증빙서류를 제시 못하는 주민들을 불법이민자로 규정하여 이들이 떠나온 곳으로 간주되는 방글라데시로 추방시키겠다고 엄포하였다. 그러나 당연히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받아들일 이유도 여력도 없기에 무국적자로 규정된 주민들은 버마에서 다수 불교도들에게 박해받고 추방당한 로힝야(Rohingya)족처럼 오갈 데 없거나 투표권, 기본 복지혜택, 재산권 등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압적 이민정책을 본 딴 것처럼 이들 무국적 주민들의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한다는 심대한 인권 침해적 선언도 지역 주민들의 미래를 극도로 불안하게 하였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점차 심각해지는 불법이민 색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강변하였지만 유엔이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에 달하는 무국적자의 신분위협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나온 조치라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2018년 말부터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모디 정부의 강경책이 2019년 봄에 실시된 총선에서 힌두 민족주의자들을 결집시켜 표를 얻기 위한 술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인도인민당이 무슬림 불법이민자들은 추방시키겠지만 힌두 불법이민자들은 지역에 머물러도 좋다고 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 이웃 무슬림 국가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넘어온 힌두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등에게는 불법이민자 취급 대신 시민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서도 유독 무슬림들은 제외되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6년간의 치밀한 준비를 거쳐 2019년 8월 31일 국가시민명부(NRC) 최종본이 공식적으로 발간되었다. 2018년 NRC 초안에 의해 약 4백 십만 명의 주민들이 무국적자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최종본에 의하면 약 백 구십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지위와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인도인민당 정부는 이들을 외부에서의 잠입자로 묘사하면서 하나의 잠입자도 남김없이 색출하여 추방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인도인민당은 무슬림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낳으면서 지역 인구분포가 힌두인들에게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며 힌두인들의 땅이 무슬림들에게 대체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위험한 발언을 지속하였다. 더 나아가 인도 정부의 내무장관인 아미트 샤(Amit Shah)는 불법이민자들을 향하여 힌두민족주의자들이 무슬림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바퀴벌레'(cockroach)로 지칭하면

서 이러한 강압적 인권 침해적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숨기지 않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극우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듯이 모디 총리와 BJP 정부도 수년간 불법이민을 타깃으로 하여 보수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NRC 강화에 눈독을 들여왔다.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무슬림들이 주로 무국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기에 인도식 극우 민족주의 포퓰리즘의 현실화에 대한 근심이 큰 상황이다. 현재 아삼주에서만 이미 무국적자들을 수용할 10개의 수용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권과 다양성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야만적 측면에 대해 국민회의당 등 야당은 '인종청소'적 정책이라고 크게 반발하였다. 하지만 모디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철저히 색출하여 단호히 추방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2019년 봄에 치러진 총선에서 인도인민당이 압승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급기야 12월 11일에 인도 의회는 시민권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NRC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법안은 우려했던 대로 인도 접경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주한 비무슬림 주민들에게 인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NRC에 대한 비판과 유사하게 이 수정법안도 무슬림들만 노골적으로 제외하였기에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제 NRC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 중 힌두, 기독교도 등은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반면에 무슬림들은 불법이민자로 완전히 낙인찍혀버리게 된 것이다. 이에 인도의 세속적 전통과 다양성을 지지하는 힌두교도들과 함께 수많은 무슬림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인도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급증하였다. 이렇게 모디 정부는 총선 압승 이후 지지자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힌두 민족, 국가 우선의 극우 포퓰리즘적 정책을 강행하여 연방 정부로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서 국내외의 큰 근심을 사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경우 국민들 간의 화합과 포용의 민주주의적 규범과 가치는 점차 희박해지고 인도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 인도의 대내외적 안보가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결론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이지만 13억에 달하는 인구에다 최근의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국민들이 빈곤에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인도의 산업구조의 형태는 선진국의 중간 공급자 형태로 인도 내 빈부의 양극화를 고조시켰다. 또한 종교, 부족, 이데올로기, 카스트를 둘러싼 정체성 갈등도 심한 편이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는 인도 독립운동을 주도한 국민회의당과 네루 총리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나 근대화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종교, 부족, 카스트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세속적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1970년대 네루 총리의 딸인 인디라 간디 총리의 중앙집권화, 권위주의화 경향과 경제 침체 등에 의해 큰 실망으로 바뀌자, 1948년 마하트마 간디 암살 후 주변화되었던 힌두 민족주의 세력이 부활하는 등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졌다.

인도의 민주주의 뒤에는 항상 집단주의와 국가 폭력이 여실하다. 정당은 종교 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 위에서 집단 테러가 자행되고 그 연쇄의 틀 꼭대기에 국가가 서 있는 것이다. 인도의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낮은 것은 문맹률 35%라는 교육 수준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은 과도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정치인들이 실제로 조장하는 집단주의와 국가의 폭력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인도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체인으로 인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그것을 올바르게 사회 내에 분배할 수 없는 국내적 요소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 국가의 위기는 배분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실적 가치의 부정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요컨대 피상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으나, 이면적인 부정적 가치가 양산하는 국가 문제를 살펴보기에 인도는 적합한 모델이었다.

서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맞이했다는 담론이 만연하다. '주권', '보호', '통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금기시됐던 말들이다. 위 세 단어를 통해 1조는 인도의 해법을 제시한다.
플라톤, 마키아벨리, 홉스 등의 정치철학에서 정의하듯, 정치의 주된 기능이 외부와 내부의 위협 모두에 대항해 데모스(demos)를 지키고 이런 공동체의 생존과 재생산을 보장하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를 중간 공급 체인으로 전락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벨류 체인에 맞서 국내적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고 만연한 정치문화와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세계화가 외향압력, 곧 외주화, 해외이전, 수출 중점 등의 관행은 글로벌 도시와 빈곤한 주변부 사이의 균열을 양산했다. 또한 외주화의 중간국의 딜레마는 국가 내 양극화를 낳았다. 양극화 문제를 무슬람 혐오로 치환하는 수법으로 나타나는 인도 내 문제는 포퓰리즘 국면에 등장한 다른 적들은 일반인의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한 반격의 결정적 경향으로서 새로운 국가 개입주의를 논의한다. 이런 경향의 배경에는 시민들이 재앙적 위기가 낳은 정치적, 경제적 혼돈을 인식하게 되면서 국가의 보호와 통제를 요구하게 된 과정이 자리한다.
요컨대 인도의 경우 무한한 성장 동력을 국내 부정적 정치문화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선진국의 외주화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사회 내 문맹률을 낮추고,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결국 사회 내 빈부격차 및 양극화를 해소할 때 비로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https://www.investindia.gov.in/ko-kr/foreign-direct-investment
·http://m.emerics.org/issueDetail.es?brdctsNo=323351&mid=a10200000000&systemcode=02(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pageIndex=1&type=0&nIndex=1809681 (한국무역협회)
·http://diverseasia.snu.ac.kr/?p=5001 (SNU 다양성+ 아시아)

·「모디노믹스 체제 이면의 인도 통상정책 연구」(박정준 외 2, 2019)
·「외국인 투자 증가, 모디노믹스의 가장 큰 성과」(김천완, 2017)
·「개발도상국 도시화와 빈곤에 관한 실증적 연구」(방설아, 2019)
· Sara Joy,『Research and Analysis Group, Export-Import Bank of India』.(2022)
· 이준구, 정선옥,『글로벌 공급사슬과 노동조건:역사적 배경과 최근 연구동향』.(2020)
· 정상준,『국제무역에 따른 국가 간 부가가치의 전유:금융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다국적기업』.(2022)
· 정혜영,『미-중 갈등 속, 동남아 미들파워 국가의 전략선택 딜레마와 그 해법』.(2020)
· 백좌흠, 이광수, 김경학, 김찬완, 이재숙. (2003). 힌두-무슬림 갈등의 구조적 성격과 동태 분석. 인도연구, 8(2), 53-94.
· 정채성. (2013). '힌두성(Hindutva)'의 개념 규정과 문화민족주의 간의 상관관계 연구. 인도연구, 18(1), 39-81.
· 이광수. (2015). 인도 힌 두 민족주의 확산 -힌두 민족주의로 집권한 모디 통합형 국가주의로 강한 인도 추구. CHINDIA Plus, 106(0), 56-57.
· 김태형. (2020). 국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외교전략 딜레마 : 인도 모디(Modi)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 국내정책과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의 충돌. 국가안보와 전략, 20(4), 105-146.
·권기철. (2006). 1991년은 인도경제 변화의 분수령인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도의 자유화 및 개혁 정책 비교 분석. 인도연구, 11(1), 1-35.
·조충제. (2008). 인도경제의 서비스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East Asian Economic Review, 12(2), 183-220.
·김찬완 (2011). 21세기 인도의 대외경제정책: 새로운 트렌드를 중심으로. 인도연구, 16(2), 1- 37.
·이지은. (2012). 탈(脫)냉전기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 정책(Connect Central Asia Policy)". 세계지역연구논총, 30(3), 178-201.
·이지은.(2013).인도의 대(對) 중앙아시아 에너지정책과 국제관계.국제정치논총,53(2),139-176.
·이지은.(2013).중앙아시아-인도 교류사.남아시아연구,19(1),191-216.
·이순철.(2018).인도의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 및 도시화 간의 인과관계 분석.산업경제연구,31(3),1183-1212.
·박영선, 인도총선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KDI 경제정보센터, 2019년 4월호
·정환보, 네루 - 간디 정치왕조의 길은 계속된다, 경향신문, 2009.01.14
·김상민, 박만원, 로열패밀리 인도정치…'네루 왕조'는 아직도 진행형,매일경제, 2011.11.21.
·산토시 쿠마르, 인도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는 사회문제, 포스코경영연구원,2006.12.15.
·이지은, 인도총선:세속주의의 부활인가, 힌두국가의 장악인가?
·이정애, 1440명이 화장실 1개 사용 인도 빈민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렵네, 한겨레, 2020.03.31.
·성혜미, "인도인 절반, 최근 1년간 뇌물제공 경험…일상생활의 일부", 연합뉴스, 2019.11.28.
·인도 제1야당 총재 "집권하면 모든 빈곤층 기본소득 보장",매일경제, 2019.01.29.